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98호
2. 발 의 자 : 황철규 의원
3. 발의일자 : 2025. 10. 20.
4. 회부일자 : 2025. 10. 23.

II. 제안이유

- 지역사회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조례 명칭을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으로 변경하여 사업 목적과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목적 (안 제1조)
2.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정의(안 제2조 제2항)

3.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안 제4조)

4.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안 제5조 제2항)

5. 명칭 변경(안 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Ⅳ. 참고사항

1.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2. 기 타

○ 입법예고(2025. 10. 28. ~ 2025. 11. 1.) 결과: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황철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198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제명 및 관련 조항 변경 검토

- ‘서울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 사업이나 ‘미래교육’이란 용어가 디지털·AI 교육 사업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고, 동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과 연계된 교육사업을 추진함을 사업명이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에 동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자치구 간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자치구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¹⁾,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협력 이외에도 광역단위(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시) 및 학교단위(학교-구청 등)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²⁾.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5).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5.10.). (가칭) 서울교육협력특구 명칭 변경 계획(안)(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보고자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명을 ‘서울미래교육지구’에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여 동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인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간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조례 제명이 변경될 경우, 조문 내용에 포함된 ‘서울미래교육지구’라는 용어도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되어야 하는바,

조문에 ‘서울미래교육지구’가 포함된 안 제1조(조문), 안 제2조(제1호, 제2호) 안 제3조(제1항, 제2항) 안 제4조(조항명 및 각호를 제외한 조문), 안 제5조(조항명,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안 제6조(조항명, 제1항, 제2항제1호,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제2항제4호), 안 제7조(조항명 및 조문, 각 호), 안 제10조(제1항~제3항), 안 제11조(조문)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를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생각합니다.

나. 안 제2조제2호(미래교육지구 사업 정의)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제2호는 ‘미래교육지구’를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는 것 이외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을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2025~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에 따르면 종전까지 추진해온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지역연계교육과정과 청소년 돌봄 및 방과후,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2026년부터 추진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는 지역특색사업의 운영과 학교-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 강화,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주요사항인바,

안 제2조제2호는 ‘교육협력특화지구’를 별도 정의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서울미래교육지구 추진 방향³⁾



다. 안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 정의)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는 ‘미래교육지구’를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는 것 이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 호(제1호~제4호)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호로 규정된 동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지역 특화사업(제1호)’,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제2호)’,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어린이·청소년지원(제3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연계·협력강화’,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지원’, ‘지역 연계 학생 성장지원 체계 구축·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안 제4조제1호~제3호는 각각 동 사업 중점 과제에 따른 세부추진내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5.2.). 2025~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

용인바, 안 제4조제1호~제3호는 동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안 제4조제4호는 중복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별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2] 서울미래교육지구 중점 과제 및 세부 추진 내용⁴⁾

중점 과제	세부 추진 내용
지역연계 · 협력 강화	1-1. 지역과 함께 만드는 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1-2. 지역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운영 지원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원	2-1.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2.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 지원
지역연계 학생성장지원체계 구축 · 운영	3-1. 지역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3-2. 지역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 지원

라. 안 제5조(미래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제1항은 ‘자치구를’ 을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2항은 지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매년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가칭)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계획안’ 에 따르면 동 사업은 자치구와의 협약 체결 이후 교육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협약은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는바⁵⁾, 안 제5조제1항 및 안 제5조2항을 개정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5.2.). 2025~2026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5.10.).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 계획(안).

마.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기존 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제2항)과 위촉직 위원(제3항)으로 구분하면서 당연직 위원에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으로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제3항)은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국장급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변경하며(제1호), 위촉위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제3호)’을 추가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안 제8조제4항은 기존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5항은 ‘미래교육지구’를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는 것 이외 간사를 사업 담당 ‘과장’에서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안 제8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부교육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개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8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제3호)’을 추가한 것은 동 사업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이므로 교원이 참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기존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을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과 실무에 대한 전문성은 강화되는 반면 위원회의 대표성과 정책 결정에 있어 연계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는바, 직급 요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거나 의사결정에 대한 연계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서 기존 ‘외부전문가’를 ‘지역사회 및 교육 전문가’로 변경한 것은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외부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8조제3항제1호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안 제8조제3항제3호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소속 공무원의 경우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여야 하므로⁶⁾ 안 제8조제3항의 “교육감이 위촉”은 “교육감이 임명·위촉”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8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위원들 구성에서 민간위원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위원회가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한 적정 비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8조제4항은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존 ‘민간위원’ 이외 당연직 위원 등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 인바,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가 해당 직 재직기간과 연계되므로 민

6) 법제처(2022.8.).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3페이지.

간위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없으나 동 조항에 단서조항(‘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원’ 을 ‘위원’ 으로 변경해도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5항은 간사를 사업 담당 ‘과장’ 에서 사업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직 위원에 부서장이 규정됨에 따라 팀장급인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위원회 운영 실무를 전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 기타

- 그 외 안 제3조에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로 변경, 안 제5조제5항의 ‘해지 할’ 을 ‘해지할’ 로 변경, 안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지도·점검’ 을 ‘지원 체계’ 로 변경, 안 제11조에서 ‘대학 및 기업 등’ 을 ‘지역기관, 대학 및 기업 등’ 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동 조례 사업 목적 및 취지를 반영하고 조문 오기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 30.).

- ☐ **이상으로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